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되어야 한다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재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유지지갑 터는 세재개편안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급속히 커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특히 8월 10일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모인 촛불에 양동이째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까 봐 화들짝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정원 게이트의 책임을 회피하며 촛불을 무시해 왔다. 심지어 원조 공안검사로서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부정선거와 정치공작에 도가 튼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민주주의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갈수록 박근혜를 압박하고 있다. 6월 말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은 한 달 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불길처럼 번지는 풀뿌리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동참했고, 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촛불의 기세가 높아지면서 그 지독하던 ‘NLL 물타기’도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사조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검찰은 대화록 열람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하며 물타기의 효과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시에 국정조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는 여전하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원세훈과 김용판도 국정조사 불출석을 통보해 온 상황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박근혜 정권의 온갖 노력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 왔다.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 가진 자들이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운 것이다.

화들짝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단지 촛불을 든 수만 명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48퍼센트만도 아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다. 이런 압력이 민주당을 장외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를 수습할 카드가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이 한 발도 물러서기 힘든 이유는 국정원 게이트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1퍼센트’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고통선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뽕뽕 뭉쳐서 불법과 부정까지 불사하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면 자신들이 펼치려는 반동적 정책들도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일당락’을 선언하며 재벌 퍼주기에서 나서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는 공작정치와 공안 탄압에 능숙한 김기춘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돌파하려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대선에 불복한다는 거냐’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아래의 압력에 속에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은 일단 거리로 나선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은 믿기 힘들다. 2008년 촛불 때도, 한미FTA 투쟁 때도 민주당은 제일 먼저 거리를 떠나며 우리의 뒤통수를 친 바 있다. 8월 10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일부 사람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투쟁과 ‘거리의 정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운동의 잠재력을 국정조사로 한정하며 박근혜가 시간을 끌며 빠져나갈 틈을 쥐서는 안 된다.

조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만든 힘도, 민주당까지 거리로 나오게 한 힘도, 뽕뽕 뭉쳤던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간에 틈이 벌어지게 만든 힘도 거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반동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거리로 끌어내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거리의 촛불과 결합시키자.

모입시다!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일시: 8월 17일, 23일 저녁 7시

장소: 서울광장 / 주최 시국회의

KTX-철도 민영화 저지 2차 범국민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KTX민영화저지범국민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승리 금속 결의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
주최: 금속노조

쌍용차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정규직화·국정조사 실시 범국민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역
주최: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쟁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앞장서면 이길 수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내팽개쳐졌고, 복지 확대 공약은 줄줄이 '먹튀'해 버리고 있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사실상 도와줬고,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며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부동산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 속에 전월세 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도 예고되면서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쥐어짜면서 '경제 활성화'라면서 재벌 퍼주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 무기 수입 등으로 국방비도 수십조 원 증액하려 한다. 이런 데 쓸 돈이 부족하니까 노동자 증세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유린도, 철도 민영화 등 고통전가도 '몸통은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범피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도 맞서야 한다. 투쟁의 쟁점과 요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 쌍용차 해고자들, 공무원노조의 투쟁 발언은 촛불 집회에서 아낌없는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

다. 8월 10일 집회 때 "조직된 80만 분의 분노를 모아서 촛불과 함께하겠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큰 박수를 받았다.

따라서 지금, 쟁점 확대는 촛불과 조직 노동자 투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지금 임단협 시기를 맞

아 노동자 투쟁도 활기를 띠고 있다.

기록적인 수익 증대를 독차지해 온 현대차 사측에 맞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준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요구하며 산별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속을 뒤집으며 뒤뚱수를 친 정부에 맞서 학교비정규직노조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하고 한바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이 탄압의 표적일뿐 아니라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 준다.

거리의 촛불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요구 투쟁을 결합시켜서 박근혜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긴 하지만 '노동자 증세'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증세 대상 노동자 수만 4백34만 명에서 2백1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려다가 들키니까, 쥐었던 돈 일부만 도로 집어넣은 격이다.

반면,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런 방향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신"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의 말에서 이미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 해설 문서도 "소득·소비 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 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과세 기반 확대'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성장 친화적 조세'란 결국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조세 저항?

결국 '증세 없이 복지 늘린다'는 박근혜의 허풍은 '노동자 증세로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언론이나 진보진영의 일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거나,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자들의 '조세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는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필요할 때

마다 맘대로 꺼내 써 왔다. 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돼 왔다.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백33퍼센트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백51퍼센트만 늘었다. 반면

'재벌·부자에게 세금, 노동자·민중에게 복지'가 답이다

진보진영 일부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해 있다. 노동자가 증세를 수용하면 재벌과 부자들도 증세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재벌 부자들이 양보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주류 정당들과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레프트21> 109호 주요기사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과 저지 투쟁

이집트 혁명 민중의 성장과 조직의 필요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퍼센트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퍼센트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었다."(선대인 경제연구소)

이렇게 걷은 돈은 4대강 같은 곳에 버려지거나 1퍼센트 특권 세력을 위해 펄펄 쓰

그러므로 '노동자도 세금 더 내자고 할 때가 아니다.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재벌 부자 증세와 노동자 복지 확대를 쟁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등 잘 정비된 복지국가 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소수 특권층을 압박했을 때 세워졌다.

지금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가 양보하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탐욕에 맞서 단결할 때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 증세 반대같은 요구를 내 걸어야 이런 단결을 이룰 수 있다.

여겼다. 정부는 7월에도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국정원의 일베충 댓글 알바에 수십억 원을 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부자 증세만으로는 복지 확대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안 맞다. 이견회의 상속세 탈세만 제대로 처벌했어도 2조 원 넘는 돈을 걷을 수 있었다. 범죄자 전두환의 불법 정치자금도 징수는커녕 더 천문학적 인 부를 늘리는 종자돈으로 사용돼 왔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 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우는 게 정답이다.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2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 집회를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장마철에 걸레를 삶아서 싸야 한다'는 뉴스를 메인으로 내보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레프트21>은 우리 사회 99퍼센트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 좌파 언론 <레프트21>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http://www.left21.com>

후쿠시마와 세습 생선 달하지 않은 지옥문

다시 듣는 맑시즘2013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의 투쟁과 연대